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하도급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

건교부, 저가 심각한 공사로 제한

직불 의무도 합리적 개선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대상이 저가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일부 공사로 제한된다.

또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직불의무 공사대상도 현행 하도급법 수준인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건설업체로 조정된다.

아울러 불법재하도급 방치 건설사에 대한 처벌조건에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이 추가되는 등 도급자의 과다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도 상당 부분 재검토된다.

반면 설계자문위의 대형공사 입찰심의 기능폐지 조항 등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올해 말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건교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규제·법령심사 과정에서 일반건설업계에 과다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이에 따른 개선권고가 시달렸기 때문이다.

소관부처인 건교부는 심사과정에서

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향후 하부규칙 개정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후 국회에 상정해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개위 심의에 상정된 6개 규제는 건설산업 관련 정보요청 범위 확대, 하도급 보호 강화, 시정명령대상 추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때 행정절차 간소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수급인의 관리강화 등이다.

조항 자체는 모두 원안통과 됐지만 3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전제조건으로 부가됐다.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강화 조항에 대해서는 원수급 건설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저가하도급 문제 시정이 필요한 일부 공사로 제한하도록 권고된 것.

당초 건교부 법령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공사는 의무조항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규개위 권고에 따라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의무대상은 향후 시행령개정 때 저가하도급 문제의 시정이 필요한 일부 공사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직접지불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우선 지급은 의무화하되

직불의무 대상공사는 현행 하도급법상의 유사규제와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 대상은 당초 건교부안에 따른 전체 공사가 아니라 하도급법상의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건설업체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체는 전체 건설업체(1만1,587개)의 65%인 7,521개사다.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거나 방치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고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불법 재하도급 방지 여부를 발주기관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규제심사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분과위에 처음 상정됐지만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기간 확대조항과 교체감리원의 타 현장배치 조항을 둘러싼 이견 속에 지난 9월 28일 재심의에서도 심의가 보류됐다.

재심의에 상정된 교체감리 PQ참가 및 타 현장배치 금지 신설안은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방향에 더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보완하도록 지적됐다.

또 10월 중 별도로 상정된 감리전문회사 손해배상가입기간 확대(착공

~완공 → 착공~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 조항도 심사에서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만 인정하는 등 학·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기술등급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조항 역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말이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규제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매매계약 사실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납부자의 편의제고 차원에서 전산 정보자료 활용으로 대체하도록 삭제된 것.

특히 개발부담금 회피를 막기 위해 연계개발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동일인 범위 확대조항은 심의 자체가 보류됐다.

건교부가 동일인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법률의 확대해석이란 논란의 여지가 커 해당조항을 삭제하라는 규제위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파주 열병합 51만kW급 확대

김포 집단에너지 부지 선정 난항

광교·김포·판교 등 이른바 2기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

서 이에 따르는 전력, 열공급 등 에너지시설사업의 시행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백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광역택지개발지구' 인 2기 신도시에는 새로운 유입 인구만 각각 10만~20만 명으로 예상돼 대단위 전력·가스·열공급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를 생태·디지털도시 등 자연친화적인 설계에 첨단 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반영된 에너지시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파주와 김포, 광교, 판교, 동탄 신도시에 대한 전력·가스·열 등 '에너지공급시설 사업계획'의 현재 사업단계, 규모, 시행추이를 살펴본다.

파주 U-City 토대 구축

파주신도시는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토지공사가 아닌 주택공사가 사업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역난방공사로 확정된 상황이다.

공사는 기존에는 35만Kw의 전기와 252G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사는 파주 운정신도시 통합개발과 택지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서 승

인받았다는 것이다.

공사는 현재 1시간에 51만 5,000Kw의 전기와 396G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CHP)와 침투부하보일러(103Gcal) 3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오는 2009년 하반기에 종합 준공을 목표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에너지설비들을 파주신도시가 꿈꾸는 U-City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된 열은 파주 교하지구와 운정신도시, 탄현지역 등 총 5만 6,000여 가구에 공급될 전망이다.

김포 - 부지확보 어려움

산자부에 따르면 김포신도시는 집단에너지사업지역으로 추진 중인데, 집단에너지사업부지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포신도시 개발자인 토지공사는 아직 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나 김포시의 중전철 건설 요구 등으로 사업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열병합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나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토공에서 검토했던 김포신도시 장기지구 인근 사업부지는 최

근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반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김포신도시는 별도의 발전설비 없이 신규 송전설비만으로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신도시가 확대되면서 발전소 건설로 급선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 사업권 각축의 장

아직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광고신도시의 경우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와 SK-CNC 등이 사업권 획득에 나선 상태다.

광고신도시에 설치되는 변압기의 설비용량은 35만7,667KVA, 최대 전력수요는 32만1,900Kw가 될 것으로 산자부는 집계하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도 최소 35만Kw급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권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이번 사업권 획득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시행사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광고 - 열병합 등 집단에너지시설

광고신도시에는 14만6,000Kw의 전기와 126Gcal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설비(CHP)와 열전용보일러(68Gcal/h) 2기, 축열조 1기, 열배관 2열(32km)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선다.

또 광고신도시에는 21만

6,839KVA 규모의 변전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7월 판교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선정된 지역난방공사는 2008년까지 이 설비를 준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이보다 앞서 입주하게 되는 주택에는 우선 분당지사에서 열을 공급한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 판교에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 - 52.5만Kw급 열병합 건설

오는 연말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동탄신도시에는 52만 5,000Kw급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전기와 열을 공급하게 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로 선정돼 있으며 당초 20만Kw급 열병합발전소가 계획돼 있었지만 태안, 병점, 진안 등 동탄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열과 전기공급까지 책임지게 됨에 따라 52만 5,000Kw급으로 확대됐다.

또 공급대상 가구 수도 당초 3만 7,970호에서 4만6,853호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열은 시간당 255Gcal, 전기는 32만5,000Kw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규모로 확대 시공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투찰률 '끝없는 추락'

60%씩 붕괴...출혈경쟁 양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최저 투찰률이 예가대비 60% 아래로 떨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업계는 공사물량 감소와 업계의 입찰전략 수정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 투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달청이 집행한 충북 청주시 수요의 '터미널사거리 지하차도 시설공사'의 개찰결과, 최저 투찰률이 예가대비 59.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6개사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61%대에 투찰한 업체는 8개사, 62%대에 투찰한 업체는 25개사였고 이를 포함해 65%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가 전체의 67%인 51개사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이 공사의 실행이 61~62%로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이다. 즉 61~62%에 공사를 수주하면 본전은 찾을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업계의 투찰률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정성 심사가 도입된 초기에는 업계가 주관적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심사 결과를 보고 주관적 심사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단 2단계 심사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 부적정공종을 발생시키더라도 낮은 금액에 투찰, 심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실제로 이 공사 입찰에서는 사전 저가사유서를 제출한 업체도 예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내년도 SOC 예산이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사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심화와 저가투찰 성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찰 성향이 떨어졌다고 낙찰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며 "입찰금액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또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1등급 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가 어려웠다.

겨울철 해고 안하면 인건비 보조

정부, 건설근로자 고용유인 확대

최저가낙찰 사회보험료 실비 인정

건설공사가 중지되는 겨울철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인건비 일부를 보조받게 된다.

또 최저가 대상공사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실비로 인정해 공사금액에 반영해 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법제화된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의 직업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상시고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건설업의 경우 '선주문·후생산방식'과 옥외생산 등의 산업특성 상 소수 인력만 정규적으로 고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시장에서 고용하고 있어 일용직 비중이 매우 높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 종사자 비중은 70.4%에 달하고 기업규모별로는 △50인 미만 기업의 임시직 종사자 비중이 66.9% △100인 미만 기업은 78.1% △300인 미만 기업은 81.2% △300인 이상 기업은 67.1%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기업이 현장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다 정부 유인책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퇴직공제제도와 고용안정 지원금제도, 그리고 불법하도급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공제와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용근로자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건설업체로서는 공사 단가를 낮추고 사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시고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겨울철 공사중단 시기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건설산업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지원방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알 수는 없지만 고용안정사업 중 지원금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에 일괄적으로 인건비 보조대책을 시행할 경우 소요자금 부담이 큰 데다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 시행착오가 클 것으로 보고 일단 내년 이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점차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장근로자의 상시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최저가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에 사회보험료를 실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보험 종류별로는 하도급업체 고용근로자 등 직접노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형식으로 시행해 사후 실비를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운용하되 노무비를 임의적으로 과소 계상할 수 없도록 법정 경비계산 방식을 개선해 적정 비용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플랜트기술 선진국 반열 올라

건산연,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담수 및 화력발전 플랜트, 개발사업 등의 경쟁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라이선스 기술이나 설계 역량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가스 플랜트 등 7개 주요 해외건설 상품의 국내 선도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스, 정유, 석유화학, 담수, 화력발전 등 5개 플랜트 시설과 초고층 빌딩, 신도시 개발 등 7개 분야 기술력은 해외시장에서 상당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라이선스 기술이나 설계같은 핵심기술보다는 구매 및 조달, 제작·시공, 시운전·유지관리 등 공통기술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업관리 역량은 철차서 부문에서 취약했다.

특히 담수 플랜트 및 화력발전 플랜트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기술 경쟁력은 일부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3개 분야도 라이선스 기술과 설계 단계에서의 취약성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

건산연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경쟁력이 높은 것은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이 충분한 데다 엔지니어링 기술에 따라 좌우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스,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도 제작 및 시공이 승산 있는 기술로 조사됐으며 부가가치 영역인 라이선스 기술이나 기본설계 역량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쳤다.

해외건축시장의 유망상품으로 꼽

상품별 기술 경쟁력 종합 점수 비교

구분	라이선스 기술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 조달	제작·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평균
가스	38.3	53.0	75.2	78.0	82.9	79.2	68.5
정유	42.2	51.2	77.2	78.0	83.8	79.0	69.2
석유화학	45.7	49.8	78.9	78.6	83.1	80.6	69.9
담수화	78.3	75.8	84.4	83.4	86.9	85.5	82.3
화력발전	68.3	81.4	85.5	78.0	82.4	82.5	80.1
초고층	55.0	51.8	58.3	68.0	76.1	71.8	63.8
개발		78.8	81.2	82.2	85.9	81.2	81.9
평균	54.6	63.1	77.2	78.0	83.0	80.0	73.7

히는 초고층 빌딩의 경우도 제작 및 시공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기업 및 경영부문의 경쟁력은 기술부문에 비해 낮게 평가됐으며 특히 파이낸싱 등 금융, 계약·클레임, 리스크 관리, 기술개발투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회사와 정부 지원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이는 조사대상 7개 상품 모두에서 나타났다.

건산연은 이번 연구는 공급자 입장에서 경쟁력을 다양하게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력이 100이면 해외시장에서 완벽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선도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폭넓게 구축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국내기업들이 높은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수의 전문기업 혹은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스타 기업군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 건교위원장에
조일현 의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새 위원장에 강원도 출신의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홍천·횡성)이 선출됐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9일 이호웅 전 위원장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건교위원회장 보궐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추천한 조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위원장은 총 투표자 수 222명 중 194표를 얻었다.

당선 인사에서 조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아 중압감이

크다”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의 조 위원장은 그동안 주로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면서 쌀 문제와 농업 구조조정 등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 대야 협상창구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작년 11월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처리 때 민노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본회의장에서 농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 언론으로부터 용기와 소신이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제14대 국회 때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국회지원단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쌀시장 개방에 항의하는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안을 예산결산특위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조 위원장 약력

△강원사대부고 △상지대 행정학과 △한양대 행정학(석사) △농촌문제연구소장 △상명대 초빙교수 △중국 베이징대 파견교수 △제14대 국회의원 △UR협상 국회의원단 대표 △통일국민당 대변인·정책위의장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운영위 간사 △국회 DDA국제협상지원소위원장 △쌀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